

공수처법 오늘 시행되는데...출범은 불가능

민주당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 개혁 입법 신속 추진해야" 통합당 "국가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졸속·무모하게는 안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해졌다.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여당 몫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보려 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방송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하며 제동이 걸렸

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접점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시기를 사실상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

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 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

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몫 추천위원 사임을 놓고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회 정상화...여야, 16일 개원 합의

22~24일 대정부질문 30일·8월 4일 본회의

여야는 오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최를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14일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약 2주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 대단히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에 도우려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정외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16일 개원식에 합의한 만큼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연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삼일위법 법안소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복수·행안·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기존 8개 삼일위까지 총 11개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또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안소위 내 안전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인사는 오는 30일까지 양당이 1명씩 추천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2명 중 1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통합당이 민주당의 동의 하에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 추천 및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

민주 1호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지구 심사권 폐지 ▲ 상시 국회 제도화 ▲ 본회의 및 삼일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재에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8월 한 달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정기국회부터 반영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구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 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연합뉴스

"부정부패 아니다"...민주, 서울·부산시장 공천론 고개

당원 주자들도 공천 불가피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원에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지만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진행되는 내년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커지면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1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당헌상의 무공천 사유인 '부정부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과거 안희정 충남지사 사퇴 이후에도 당에서 이 같이 판단해 후보를 낸 관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등 재보궐 선거의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쪽이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리에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지난 4월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천안시장 보선에도 후보를 냈다. 당시 충남지사 선거는 안 전 지사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아닌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였고, 천안 보선은 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실시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있으나 재판을 통한 사실 여부 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부산시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이 중대한지를 추후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라며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다"고 공천 불가피론을 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 정당으로서 후

보를 내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정당 활동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16일)을 앞두고 있고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변수다.

서울과 부산 두 곳만 합쳐도 1000만명이 넘는 '대선급' 선거인데 다른 지자체장까지 합쳐진다면 대선을 앞두고 말 그대로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지는데 현실적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17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사퇴 등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빈 곳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도입 않기로

전준위, 전대 온라인 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4일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안규백 전준위원장님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전준위에서는 최고위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운신 폭이 제한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대표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고려, 8·29 전당대회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준위는 내주 대선 경선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